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강준 : 의정감시센터, 725-7104)
제 목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한 1차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
날 짜 2000년 10월 5일 (목) (총 4 쪽)

보 도 자 료

선거비용 실사 정보공개 꺼리는 선관위, 무엇이 두려운가?

일시 및 장소 : 2000년 10월 5일 (목)

1.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8일 중앙선관위에 6개 항목(별첨1 참조)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이에 한번의 공개연기 끝에 무려 한달여 만에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정보는 실망을 금할 수 없을만큼 부실하여, 참여연대는 오늘 추가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한편, 이러한 선관위의 무성의한 조치는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임을 명확히 인식해 성실히 정보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6건의 항목중에 선관위가 성실히 공개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했으며, 3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1건은 민주당의 반대로 반쪽 공개, 나머지 하나는 청구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자료를 공개했다(별첨 1).
3.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실사후 선거비용 위반사례로 적발된 200명의 국회의원 명단과 그 내역일체에 대해 "선거비용 위반사례로 적발된 국회의원이 200명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당선자와 관련시킬 경우 이에 해당하는 당선자가 200명"이라며, 정작 청구내용인 200명의 명단과 그 위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의 선거법 위반 판결의 형량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선관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더구나

20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4. 선관위의 부실한 정보공개도 문제지만, “5월부터 8월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문사본 일체”에 대해 관계인 청취결과 민주당의 반대로 이 기간동안 민주당이 선관위에 보낸 공문사본이 비공개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받았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접수시킨 공문사본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 선관위의 수동적인 자세도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5. 끝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6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현역 국회의원 227명(지역구)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세부내역 일체에 대해 선거법을 근거로 비공개하였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인 알권리를 하위법인 선거법이 침해한 것으로서 관계법을 즉각 개정하여야만 한다. 현행 선거법 133조는 “...공고일부터 3월간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을 어떻게 하면 유권자가 보기 어렵게 할까 고심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6.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낱낱이 조사하여 고발조치 하였던 선관위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감시대상인 정치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다면 과연 선관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관위의 정보공개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추가로 중앙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서(별첨 2)를 접수시키고자 한다. 의혹이 해소될 수 선관위의 성실한 자료공개를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내역 요약
2. 추가 정보공개청구 내역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1.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내역 요약

◆공개

-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비용을 신고한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통해 파악된 결과의 비교표.

◆부분공개

- 2000년 5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온 공문사본 일체.
 - ☞ 한나라당 공개, 민주당은 관계인 청취결과 공개 불가

◆비공개

-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후 현역 국회의원 227명(지역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의 세부내역 일체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등 비공개결정
-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된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실사후 선거비용 위반사례로 적발된 200명의 국회의원 명단과 그 내역 일체.
 - ☞ 선거비용 위반사례로 적발된 국회의원이 200명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선거사무장, 당원, 일반인 등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당선자와 관련시킬 경우 이에 해당하는 당선자가 200명이라는 것
-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비용의 위법적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한 19명(민주당 12명, 한나라당 7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한 회의의 일자 및 장소, 회의록 일체와 함께 19명을 선정하게된 선정근거의 상세내용.
 - ☞ 15대 국회 총선거시의 조치사례를 기준으로 검찰기소사례와 법원의 판결례를 참조하였고, 기타 위반행위의 동기와 고의성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선관위가 결정한 것

◆청구한 내용과 다른 엉뚱한 정보공개

-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때 사용한 현역 국회의원 227명(지역구)의 선거비용 신고에 대해 '선거비용 확인·조사권'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조사결과 내용의 세부내역 일체.
 - ☞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관계 업체 등 120,473명의 선거비용 실사상황과 후보자 등 1,568명에 대한 정당별·신분별·조치별 건수 공개

■별첨자료■ 2. 추가 정보공개청구 내역

◆중앙선관위

1.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된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실사후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존·비속,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원, 당원, 일반인 등”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당선자와 연관시킬 경우 이에 해당하는 당선자 200명의 명단과 그 위반행위 내역
2. 16대 국회의원 총선거때 사용한 현역 국회의원 227명(지역구)의 선거비용신고에 대해 ‘선거비용 확인·조사권’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실사한 “의원별” 실사상황 및 실사결과 조치현황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존·비속,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원, 당원, 일반인 등”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포함)
3. 선거비용 외에 선관위가 확인·조사한 현역 국회의원 227명(지역구)의 선거법 위반행위의 의원별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존·비속,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원, 당원, 일반인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유관 의원으로 포함)

◆시·도선관위

1.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비용의 위법적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할 시도선관위에서 진행한 회의의 일자 및 장소, 회의록, 이들을 선정하게 된 선정근거의 상세내역

- 서울시 선관위 : 김영배, 장성민,
- 경기도 선관위 : 이운수, 이희규, 김부겸
- 인천시 선관위 : 송영길, 이호웅, 박상규, 이운성, 민봉기
- 부산시 선관위 : 김형오
- 대전시 선관위 : 송석찬
- 대구시 선관위 : 박종근
- 강원도 선관위 : 이창복, 김용학
- 충청남도 선관위 : 전용학
- 제주도 선관위 : 장정언
- 전라남도 선관위 : 이정일
- 경상북도 선관위 : 권오을